

진보당 기획토론회

청소년 혐오표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자료집

 일시 2026. 9. 8(화),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주관 **진보당** 여성위원회, 손솔의원

좌장 : 진보당 최고위원 송영주

발제 : 진보당 비교섭단체연구-청소년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 여성위원장 조은영

토론 1 :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 교사들의 대안교육 사례 / 옥정중학교 교사 채현지

토론 2 : 온라인(플랫폼, 일베)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 청년오늘연구소 박태훈

토론 3 : 양육자가 요구하는 학교와 사회 구조적 해결 방안 / 청소년 양육자 노주현

토론 4 : 인권 문화의 다양성훈련으로 대안찾기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사무국장 김연웅

★ 국회의원 회관 출입시 신분증 지참

진보당 기획토론회

청소년 혐오표현,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좌장 : 송영주 최고위원

□ 발제 : 청소년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 조은영 여성위원장

- 토론1 :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 교사들의 대안교육 사례 / 채현지 옥정중학교 교사
- 토론2 : 온라인(플랫폼, 일베)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 청년오늘연구소 박태훈
- 토론3 : 양육자가 요구하는 학교와 사회 구조적 해결 방안 / 청소년 양육자 노주현
- 토론4 : 인권·문화 다양성훈련으로 대안찾기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사무국장 김연웅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진보당 여성위원회, 좌장을 맡아주신 송영주 진보당 최고위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조은영 여성위원장님, 토론으로 함께해주시는 채현지 옥정중학교 선생님,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 소장님, 노주현 청소년 양육자님, 김연웅 남다른성연구소 사무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의 일상에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스며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SNS에서 접한 혐오표현이 ‘밈’과 ‘농담’, ‘놀이’의 모습으로 학교에 들어오고, 다시 또래 사이에서 반복되고 확산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서울학생 3,831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1.6%가 차별·혐오표현을 경험했고, 고등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64.2%에 달했습니다. 성별과 외모, 성소수자, 장애, 인종 등을 겨냥한 표현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 심리적 안전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사건은 이 문제를 우리 눈앞에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대기업에서 시작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장난’이나 ‘놀이’의 모습으로 학생

들의 운동장에까지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작성된 경위서에서 다수의 학생들은 이 표현이 5·18과 관련된 것인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혐오가 너무 쉽게 놀이가 되고, 누군가의 정체성과 지역,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말이 그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따라 하는 유행어가 되고 있던 것입니다.

배재고 사건 이후 전국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사이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는 교사가 89.3%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온라인에서의 혐오 문화 확산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려 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 될까 봐’,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까 봐’ 망설인다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있고 이를 숙지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2.1%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에게 혐오가 자연스러운 언어로 자리 잡을 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뒤 징계만 하는 것으로는 같은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처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잘 듣고, 국회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서로의 존엄을 배우고 지키는 학교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2026년 9월 8일, 진보당 여성위원장 조은영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 2026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에 '탱크데이'·'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하면서 혐오 논란이 폭발
- 봉하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기간 중 '일베 인증' 손가락 사진이 SNS에 게시, 청소년 사이에 '부영이바위' 등 노래와 밈 유행.
- 이재명 대통령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징벌배상 공론화'를 언급, 극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



혐오표현의 정의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 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고 노무현 전대통령 조롱 자체는 좁은 의미의 혐오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일베식 조롱 문화 속에서는 차별과 멸시를 확산시키는 혐오담론으로 기능한다.”

왜 청소년인가?

10여 년 전

혐오표현을 놀이로 소비하던 청소년들이 이제 20·3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뚜렷한 보수화 경향을 보입니다

2025 대선 출구조사

20대 남성 유권자의 74%가 김문수·이준석을 지지했습니다. 40대 남성의 지지율(22.2%+4.2%)과 명징하게 대비됩니다.

2026 지방선거

20대 남성 유권자의 70%가 오세훈에게 투표했습니다. 청년 세대 내 성별 정치 성향 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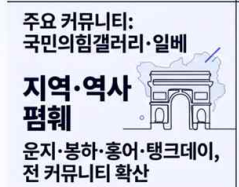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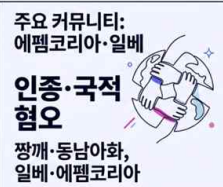
청소년 혐오의 실태

1) 혐오는 '주변부의 일탈'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말과 코드는 유튜브·인스타그램·온라인 게임으로 옮겨가고, 다시 교실과 군대 같은 일상으로 흘러들어 학교 시험지와 공공 행정 시스템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2) 혐오표현의 다섯 가지 유형

'우리'를 위협한다는 외부 집단-진보 진영, 여성, 호남, 중국, 소수자-을 향해 결국 **하나의 적대 전선**으로 모임

 다섯 가지 혐오표현 유형 다섯 가지 (40자 이내)	 정치혐오 짖·배급견·민꽃방송국, 짖·배급견·민꽃방송국, 국민의힘 검갤러리·일베	 여성혐오 김치녀·맘충 주요 커뮤니티: 에펠폰리아·일베 지역·역사 폄훼
 지역·역사 폄훼 운지·봉하·홍어·탱크데이, 전 커뮤니티 확산	 인종·국적 혐오 짹개·동남아화, 일베·에펠폰리아	 소수자 배제 게이XX·너 페미지?·병신, 전 커뮤니티

강신재·김경내·조은미·박태훈(2025), 2030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담론: 계엄 이후 일베·디시인사이드·에펠폰리아에 대한 텍스트 분석」

3) 커뮤니티별 혐오 양상의 차이

항목	국민의힘갤러리	일베저장소	에펠포리아
주요 콘텐츠	제도권 정당 정치·탄핵·계엄 공방	지역 차별·여성혐오·부정선거 음모론	게임·스포츠·일상 + 정치 이슈 순간 반응
혐오 네트워크 중심	정치인·진영 적대어	젠더·지역·인종 혐오어(초밀집)	젠더·지역·인종 혐오어(간헐적·폭발적)
정치적 성격	명시적 정치 공간	노골적·이념적	‘비정치성의 정치성’
1위 단어	욕설 ‘새끼’(정치 비판과 인격 모욕이 한 덩어리로 굳어 있음)	욕설 ‘새끼’(혐오·비하 표현과 결합해 더욱 노골적)	욕설 ‘새끼’(일상적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
사건 충격 시 반응	탄핵, 계엄 키워드 급증	모든 혐오 키워드 동반 급증	평소 비정치적이다가 사건 발생 시 폭발적으로 혐오 키워드 급증, 빠른 확산

사회 여성

"혐오·차별 대응 자료서 '성소수자' 뺀 교육부, 전세계적 망신"

고나린, 박정연 기자

수정 2026-08-28 18:26

3:16

구글 선택 매체 등록

교육·인권·종교단체 잇단 성명...전면 재검토 촉구



2026 제27회 서울퀴어문화제가 지난 8월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및 종로구 우성로로 일대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열전하고 있다. 김세윤 기자 unique@hani.co.kr

' 혐오, 차별 ' 에도
위계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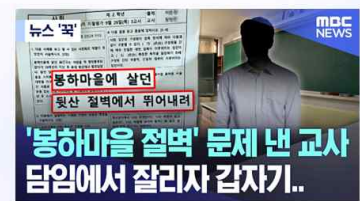
4) 청소년 일상으로의 침투: 주요 사례

혐오표현은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지, 체육대회 피켓, 법원 폭동 현장, 소셜미디어 극우 채널까지 - 청소년의 일상 곳곳에 혐오가 스며든 구체적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1 2024.9
경남 중학교 사회 시험지에 '봉화마을 윤 땡땡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예문 삽입.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혐오표현이 교육 현장 내부에서 재생산되는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2 2025.5
경기 안양 고교 체육대회 '여자 목소리는 80dB 넘어선 안 된다' 피켓 등장. 학생이 직접 제작한 피켓으로, 여성혐오 표현이 또래 문화 속에서 '재미'로 소비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 3 2025.12~
12·3 계엄 직후 2007~2012년생 청소년 190여 명 탄핵 반대 시국선언, 일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가담. 청소년이 단순 관람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 동원되고 있으며, 극우 온라인 문화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됩니다.
- 4 2026.3
인스타그램 '자유대학' 등 대학생 주도 극우 콘텐츠, 팔로워 10만·조회수 200만. 연애·진로·일상 콘텐츠로 접근한 뒤 혐오 프레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05230055>



[뉴스 '국'] '봉화마을 절벽' 문제 낸 교사, 담임에서 잘리자 갑자기..
(2024.10.02/MBC뉴스)

숫자로 보는 청소년 혐오 노출 실태

92.5%

일베 인지율

경기도교육연구원(2016), 고교생 대상 '김치녀' 인지율 90.6%

59.5%

혐오표현 접촉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여성·남성 혐오 표현 접촉
경험(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1위 매체: 유튜브 38.8%

68.3%

혐오 경험

청소년 혐오표현 경험률(국가인권위원회, 2019). 성인(64.2%)보다 높음.
83%는 온라인에서 접촉

78.9%

남성 차별 인식

20대 남성 중 '남성 차별이 심각하다' 응답(한국리서치, 2021). '여성 차별 심각' 응답(38%)의 두 배

5) "일베야"라는 말의 무게 변화

10년 전

"너 일베지?"라는 지목은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일베라는 게 들롱나면 또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사회적 비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

지목된 학생이 웃고 주변도 같이 웃습니다. 교실에서 노 전 대통령의 '노' 자만 나와도 자동으로 웃음이 터집니다. (MBC PD수첩, 2026.6.16.)

사회적 비용의 소멸

부끄러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기 성찰이 작동하지 않는다

혐오의 캐릭터화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재미있는 밈'**으로 인식 → 가해 의식 무력화

다수자 위치로 전환

음지의 소수에서 **또래 다수**의 '공기'로 - 도전받지 않는 코드

6) 과거 또래 욕설 vs 일베 문화

과거 또래 문화

1. 표적

또래 개인

2. 금기 의식

금기를 의식하며 위반

3. 정치성

비정치적 사적 일탈

4. 역사 의식

역사관 부재

5. 사회적 결과

또래 갈등의 일시적 잡음

일베 문화

1. 표적

사회적 약자 집단 전체

2. 금기 의식

금기 자체를 해체하는 쾌락

3. 정치성

반민주·반페미·반외국인 이데올로기 운반체

4. 역사 의식

5·18·노무현 등 역사 왜곡·조롱

5. 사회적 결과

민주주의·평등 규범 자체의 침식

□ 일베 문화는 인륜과 사회적 금기 자체를 해체하는 데서 쾌락을 얻고, 파시즘적 성향과 역사 왜곡을 내장한 문화입니다. '다 그런 시기가 있다'는 동일시는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청소년 혐오문화 실태-교육감 선거와 혐오의 정치화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동성애 OUT", "전교조 OUT" 등의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보수 후보 5인은 정책연대 선언문을 발표하며 "검증되지 않은 동성애 퀴어교육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선거 결과

광역시	진보 후보(당선)	동성애, 혐오, 차별 구호 후보
서울	정근식 30.26%	조전혁 23.54% 윤호상 14.5%
부산	김석준 50.63%	정승윤 33.12%
인천	도성훈 36.35%	이대형 35.59%
강원	강삼영 41.54%	신경호 33.09%
충남	이병도 30.59%	이명수 25.81%

제도적 공백

진보당 손승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인종혐오표현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자의 혐오·차별 구호 사용을 제지할 어떤 제도도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 조혁진후보 현수막



▲ 윤호상후보 1인시위



▲ 보수 교육감후보 5인

혐오문화의 특징

1 놀이문화로의 발전

누군가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것이 **재미처럼 소비**됩니다.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청소년도, 또래문화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집단성·대중성 형성

혐오표현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들의 표식으로 집단성을 형성하고, 미디어를 통해 대중성을 획득합니다.

3 표현 방식의 다양화·내재화

욕설에서 인터넷 밈·영상·짤로 확장. 기성세대가 알 수 없는 표현으로 공개되어 '모르는 것 자체'도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4 전 세대 상호 혐오 재생산

젠민이·급식충·이대남·이대녀·맘충·툼딱충 등 세대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현상이 확산됩니다.

5 공간과 공간을 잇다

온라인 공간에만 존재했던 혐오가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들과 유튜버들이 혐오문화를 생성하고 확산을 조장한다면, 청소년은 그것을 학습하여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래문화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

대안 모색 — 사회구조적 문제

① 혐오의 뿌리: 능력주의 좌절과 공정성 배신

부동산 폭등,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청년 세대가 느낀 **'공정 배신감'**이 진보 진영 전반을 향한 반감으로 굳었습니다. 사다리가 막혔다는 좌절은 여성·이주민·소수자를 향해 방향을 튼니다.

② 결집의 원리: 부정적 정체성(Negative Identity)

"우리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이 아니다"**—민주당이 아니고,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친중이 아니다—라는 배제를 통해 집단의 선을 긋습니다. 혐오표현은 이 정체성의 필수 언어가 됩니다. 상대를 욕하는 행위 자체가 내집단 소속을 증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③ 증폭 기제: 알고리즘·에코 챔버·탈진실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의 추천 알고리즘이 극우 콘텐츠를 반복 노출하고, 같은 정보만 도는 **에코 챔버 안에서 확증편향**이 두꺼워집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인스타그램이 대안 언론'이라고 말하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이 기성 언론을 못 믿고, 알고리즘이 골라준 인스타그램·유튜브를 '진짜 언론'으로 신뢰하는 역전 현상은, **검증되지 않은 극우 서사가 사실의 지위를 차지**하는 탈진실 구조의 핵심 동력이다.

대안 모색 — 사회구조적 문제

④ 한국형 극우 포퓰리즘의 태동과 정치적 도구화



국제적 흐름

영국 리폼 UK, 프랑스 국민연합, 미국 트럼프 현상처럼 온라인 반기독권 정서가 정치 동원력으로 전환. 호주 멜버른대학교는 한국 청년 남성의 보수화를 병역·취업 경쟁의 좌절과 반페미니즘 정서의 결합으로 풀이, 이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관찰되는 '청년세대 내 남녀 정치 성향 분기 (gender divergence)'의 한국 버전으로 본다.



한국의 특수성

서구 극우의 반이민·종교 프레임 자리에 **반중 정서**와 **병역에 기댄 '공정' 담론**이 들어섭니다. 같은 구조적 동력이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다른 표적으로 굴절됩니다.



정치적 도구화

극우 인플루언서들이 연애·진로·게임으로 접근한 뒤 혐오 프레임을 끼워 넣습니다. 70만 구독 극우 유튜버가 광주 고교 축제에 '멋진 형'으로 등장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안 모색 — 사회구조적 문제

⑤ 교실은 왜 무력한가: 교사 개입의 한계

1 시간 비대칭

알고리즘은 24시간 청소년을 붙잡지만, 교사가 혐오표현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주 1~2시간에 불과합니다.

2 권위 비대칭

또래 다수의 집단 압력 앞에서 교사 한 명의 목소리는 쉽게 묻힙니다. 혐오표현을 지적하면 오히려 교사가 '진지충'으로 조롱받기도 합니다.

3 콘텐츠 매력 비대칭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극우 콘텐츠에 비해 시민교육은 설명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청소년의 주의를 끌기 어렵습니다.

4 제도적 비대칭

극우 인플루언서는 무제한으로 정치화하는 반면,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혐오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비대칭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교사가 권위마저 약하고, 매력 없는 콘텐츠를 다루면서, 제도적 보호도 없는 상태로 청소년 앞에 서 있는 구조

교육현장의 제도화 사례(해외)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학교의 예방·기록·조사·교육·구제 의무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국가·권역	평등·차별 법적 기반	학교에 실제로 생긴 제도	한국에 주는 의미
영국 / 스코틀랜드	Equality Act 2010 + PSED ¹	차별 제거뿐 아니라 기회평등·집단 간 좋은 관계 증진 의무. 스코틀랜드 지침은 인종차별 사건 신고를 기록하고 racist "banter"도 기록대상으로 제시 ²	평등법이 차별금지에서 예방적 평등책무로 확장
스웨덴	Discrimination Act 2008 ³	차별 관련 harassment 인지 시 조사·재발방지 의무. 차별위험을 조사→분석→조치→평가하고 문서화 ⁴	사건처리를 넘어 학교환경의 차별위험을 지속 점검
노르웨이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Act + Education Act ⁵	적극적 평등 의무 + 학교의 차별·괴롭힘 무관용 원칙. 교직원 관할→개입→보고→조사→조치 ⁶	평등법 원칙을 교사의 구체적 행동의무로 연결
캐나다 온타리오	Human Rights Code + Education Act + PPM 144-145 ⁷	bias / prejudice / hate 동기의 bullying을 명시하고 징계·대응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활용 ⁸	행위뿐 아니라 편견·혐오 동기까지 제도적으로 식별
호주 NSW	NSW Anti-Discrimination Act + Racial Discrimination Act ⁹	모든 공립학교에 ARCO(인종차별 대응 담당자) 지정. 교직원 교육·신고지원·기록·모니터링 ¹⁰	학교마다 인종차별 전문 대응체계를 두는 모델
독일	AGG 존재, 그러나 공립학교 학생의 실질적 적용 구제하는 한계 ¹¹	학교교육이 주 관할이라 보호수준 편차. 연방차별금지청은 학교법상 차별금지·예방의무와 독립 옴부즈기구 확대 권고 ¹²	법의 존재보다 교육 적용범위·예방의무·구제수단이 중요

포괄적 차별금지, 평등법과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

슬라이드 1의 ①~⑫ 각주와 20주 발표문

“해외의 법제와 연구는 포괄적 차별금지·평등법 등이 혐오문화를 단독으로 제거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음. 그러나 차별을 명명하고, 보호사유를 설정하고, 교육기관에 예방·조사·개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의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이 학교의 차별 대응을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영국·스웨덴·노르웨이는 평등법을 학교의 적극적 의무로 연결해 예방·기록·환경 점검까지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연방 평등법이 있어도 공립학교 학생에게 실질적 구제수단이 약해 보호공백이 지적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의 이름보다 교육영역에 대한 적용과 집행입니다.

① Equality Act 2010, s.149; EHRC, Public Sector Equality Duty Guidance.

② Scottish Government, Addressing Racism and Racist Incidents in Schools (2025); Whole School Approach (2026).

③ Sweden, Discrimination Act (2008:567), Ch.2 §7.

④ Swedish Equality Ombudsman(DO), Active Measures for Preschool and School.

⑤ Norway,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Act, §915, 24.

⑥ Norway, Education Act Ch.12;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School Environment Guidance.

⑦ Ontario, Human Rights Code; Education Act; PPM 144-145.

⑧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PPM 144: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⑨ NSW, Anti-Discrimination Act 1977; Commonwealth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⑩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ti-Racism Policy & Procedures.

⑪ Germany, General Equal Treatment Act(AGG) §2; Federal Anti-Discrimination Agency school guidance.

⑫ Federal Anti-Discrimination Agency, Fifth Joint Report on Discrimination in Germany (2026).

1702

해외 교육적 대응 프로그램



BRICKS (EU)

온라인 혐오 발언 대항 프로젝트. 이탈리아 5개 학교 580명 참여, 200시간 워크숍. 소셜미디어 이해·혐오표현 분석·관점 이해 등 15개 모듈 구성.



Generation Global

13~17세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국가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양합니다.



용기 있는 학교 (독일)

독일 전역 수천 개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주도형 반차별 네트워크. 극우주의·반유대주의·동성애혐오 등 혐오 주제 학생 안내 자료 제공.

대안 모색: 다섯 가지 제도 개혁 축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성별·장애·나이·출신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 기본법. 혐오의 일상화를 막을 사회적 기준선을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 강화 및 작동 원리 공개 의무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과에 편입. 독일·핀란드 사례 참고.



㉢ 청소년 보호 온·오프라인 제도

극우·혐오 콘텐츠 상시 모니터링·신고 체계 강화. 학교에서 민주주의·인권·역사 교육 강화. 여교사 성희롱·페미니즘 혐오 피해 보호 체계 구축.



㉣ 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사가 민주주의 가치·역사적 사실·혐오의 해악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모든 교육적 개입의 전제 조건입니다.



㉤ 혐오표현 대응 매뉴얼 & 실효성 있는 교육

제도화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혐오표현 대응 매뉴얼을 국가 차원에서 제작·배포합니다. 단순 금지·처벌 중심이 아닌, 혐오표현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화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EU BRICKS 프로그램처럼 소셜미디어 이해·혐오표현 분석·관점 이해를 포함한 모듈형 교육과정을 정규 교과에 편입하고, 교사 연수를 의무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 교사들의 대안 교육 사례

— 옥정중학교 “혐오, 학교가 답하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채현지 옥정중학교 교사

1. 서론: 왜 지금, 학교에서 혐오 표현을 다뤄야 하는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혐오 표현은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니다. 학생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며,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장난’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혐오 표현이 교사의 지도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에도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교사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모습은, 해당 언어가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의식 없이 통용되는 일상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따라 사용하며, 그 자체가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시에 해당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이를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교실 분위기나 또래 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쉽게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본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으로 학교를 지목했으며, 상당수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언어가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혐오 표현을 접했을 때 이를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로는 ‘무서워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관계가 틀어질까 봐’ 등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혐오 표현이 단순한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관계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는 이를 방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육해야 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에 본교에서는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혐오, 학교가 답하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본 토론문에서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혐오 표현 교육의 실제와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과 실태 파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혐오 표현이 수업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일상화된 상황은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교는 혐오 표현 문제를 단편적으로 지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설문조사 분과’, ‘수업 분과’, ‘캠페인 분과’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태 파악-교육-실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설문조사 분과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해당 조사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양상과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교육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문 결과, 학생의 약 절반이 혐오 표현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성별, 정치·이념 관련 표현 등이 주요 대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해당 표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혐오 표현이 일부 학생의 일탈적 언어 사용이 아니라, 학교 전반에 퍼져 있는 일상적 언어 문화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설문조사는 단순한 자료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이후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2.2. 전교생 참여형 수업 설계: 수업 분과

TF팀의 두 번째 핵심 활동은 혐오 표현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였다. 본교는 일부 학급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전교생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대표 수업’ 형태를 채택했다. 이를 위해 수업 분과는 수업안을 개발하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공유 및 시연을 진행했다.

1차시 수업은 혐오 표현의 개념과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도입에서는 실제 학교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 주요 대상, 그리고 심각성 인식 정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이어지는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을 직접 분석하도록 했다. ‘이 표현이 왜 웃긴가’, ‘이 표현으로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무심코 사용하던 언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 반응에

따라 발화를 조절하며, 장난으로 사용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개 단계에서는 혐오의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로 확장하여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혐오의 피라미드’를 활용하여, 단순한 말이 편견과 배제,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차시 수업은 혐오 표현에 대한 실천적 대응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수업 도입에서는 학생들이 혐오 표현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학생들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했다. ‘동조하지 않기’, ‘불편함 표현하기’, ‘문제점 설명하기’와 같은 단계적 대응 전략을 익히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진행했다.

특히 모둠 활동을 통해 제시된 상황에 맞는 ‘대항 표현’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은 수업의 핵심이었다. 학생들은 표현의 문제점을 짚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발표를 통해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공유하며, 혐오 표현에 맞서는 언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다.

마지막으로 학급 내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직접 정리하고 다짐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수업 내용을 공동체의 규범으로 확장했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실천 의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수업은 혐오 표현을 ‘금지해야 할 말’로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언어를 성찰하고 대안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2.3.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의 확장: 캠페인 분과

학교 교육의 한계 중 하나는 일회성 수업으로 끝나기 쉽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교는 캠페인 분과를 통해 교육 내용을 일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혐오 표현 금지’ 배지 제작 이벤트가 있다. 학생들은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한 메시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이를 배지로 제작하여 공유했다.

또한 등교 시간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 사용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언어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3. 결론: 학교 혐오 표현 교육의 의의와 과제

“혐오, 학교가 답하다” 프로젝트는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 학교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이 사례의 가장 큰 의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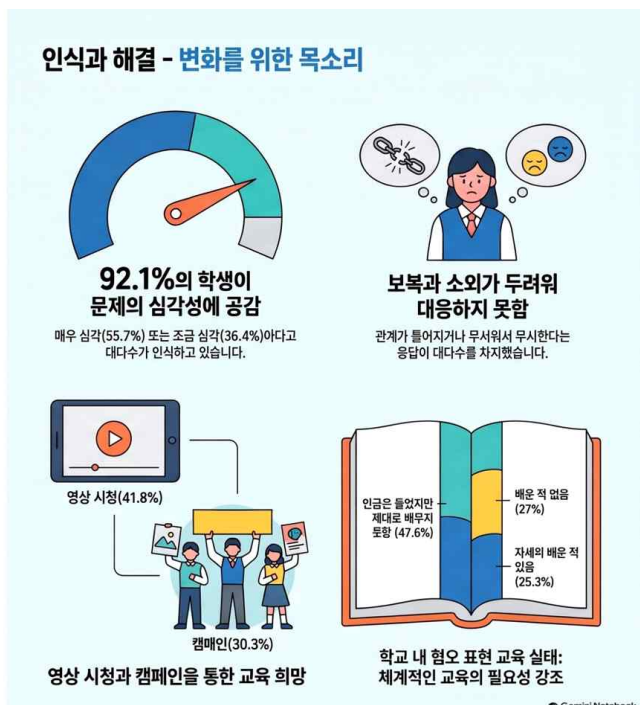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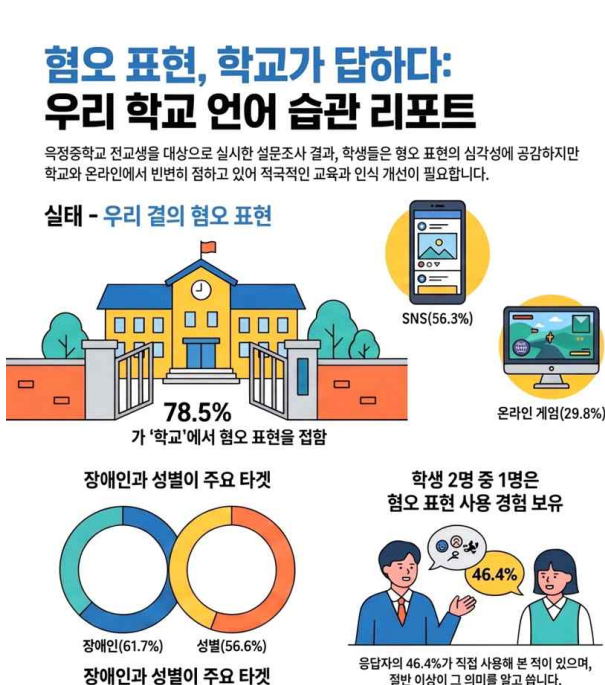
첫째, 학생들의 실제 언어 사용을 기반으로 교육을 설계함으로써 현실성과 설득력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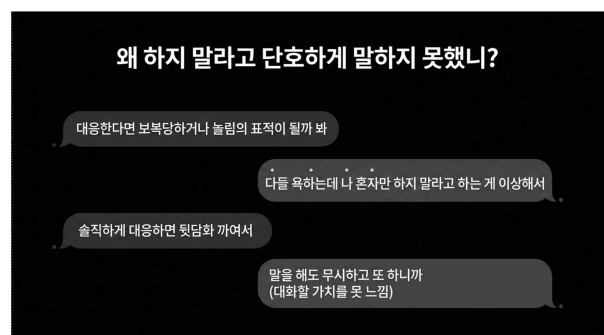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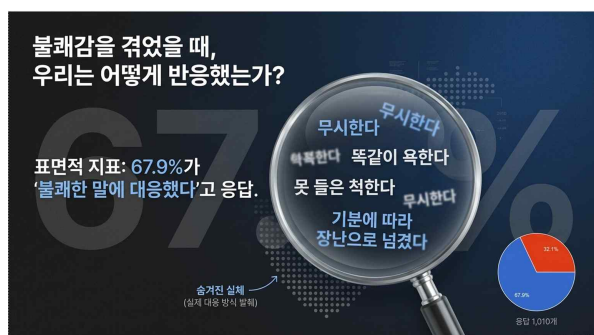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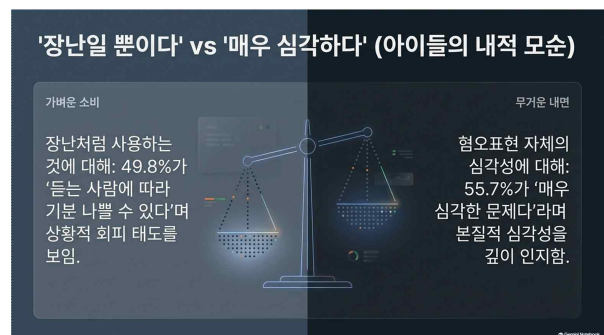
둘째, 전교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교 전체의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다.

셋째,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교육을 일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 또한 존재한다. 우선, 단기간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언어 습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학교 문화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인식과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는 혐오 표현을 단순히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접근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단한 필수 노력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
친구들끼리 경각심 갖기 (27.6%)	일방적 훈계(강의식 19.3%)에서 벗어나,
정확한 의미와 역사적 배경 교육 (24.2%)	관련 영상 시청 (41.8%)
학교의 반복적 교육 (20.4%)	캠페인 직접 기획 (30.3%)
	역할극 / 토론 (35.9%)

학생들은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Action Plan 1. 학교의 약속: 연대와 존중의 교실로

정확한 뿌리 교육
단순 문제를 넘어, 혐오표현의 어원과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가르쳐 단어의 무게를 깨닫게 합니다.

학생 주도형 참여 수업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캠페인, 공익광고 영상 제작, 역할극을 정규 수업에 적극 도입합니다.

안전한 피드백 체계
보복의 두려움 없이 '명확'하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하고 안전한 교내 가이드라인을 구축합니다.

Action Plan 2. 가정의 역할: 아이가 가장 먼저 만나는 '필터'

- 어른들의 거울 점검**
가정 내에서 어른들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편향어, 비하 발언 등 일상 언어 습관부터 점검해 주세요.
- 미디어 가이드 제공**
SNS와 온라인 게임 노출 시, 아이와 함께 유해성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 방어자에 대한 지지**
아이가 집단 내에서 용기 내어 '기분 나쁘니 하지 마'라고 거부했을 때, 비난받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칭찬해 주세요.

Action Plan 3. 학생들의 용기: 혼자서는 이상하지만, 함께하면 '문화'가 됩니다.

장난이라는 핑계 지우기
누군가 다지는 말은 더 이상 장난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작은 용기의 연대
'그 말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 줘.' 용기 낸 친구의 목소리에 무시 대신 고개를 끄덕여주는 단 한 명의 동조자가 되어 줍시다.

혐오, 학교가 답하다.
이제 우리가 함께 답할 차례입니다.

[옥정중학교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시작]

우리 아이들의 솔직한 고백에 이제 어른들과 학교가 실천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가정, 학교, 학생 3주체가 함께 만드는 변화의 첫걸음에 동참해 주십시오.



청소년 혐오표현과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성

규제의 단위를 게시물에서 설계로 옮겨야 합니다

박태훈(청년오늘연구소 소장)

1. 게시물 단위 규제는 왜 무력한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불법 게시물 삭제를 위한 특별 소통채널을 만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채널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일베 관련 게시물의 심의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게시물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운영진도 잘 협조하는 편이라고 말합니다.¹⁾

신고하면 지워지고 운영자도 협조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유통되는 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발제문이 정리한 대로 일베의 어휘는 그 사이 교실과 시험지와 학교 행정 시스템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은 방미심위가 불법정보의 처리 거부와 정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은 게시물 하나하나입니다. 삭제 조치는 계속 이루어지지만,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조치는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2016년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2021년 디시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²⁾. 폐쇄의 요건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70% 기준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³⁾.

2026년의 경과가 이 한계를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25년 5월19일 일베폐쇄서포터즈가 11만명의 서명부를 대통령실에 전달 했고, 5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배상, 과징금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⁴⁾. 그러나 이틀 뒤 방미심위는 대통령 언급 이후 별도의 대책이나 관련 법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⁵⁾. 2018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23

1) 「일베'핫라인' 10년째지만...여전한 혐오 논란, 폐쇄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2026년5월28일.

2) 「대통령이 재점화한'일베' 폐쇄...법적 쟁점은?」, YTN, 2026년5월25일

3) 머니투데이, 앞의 보도. 이른바70퍼센트 기준은2018년 청와대가 제시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미심위 내부 판단 기준이다.

4) 홍신영, 「이 대통령이 다시 꺼낸'일베 폐쇄'...문재인 정부 땀 하다 중단...이번엔?」, MBC 뉴스데스크, 2026년5월25일.

5) 「대통령이 불붙인'일베 폐쇄'...쟁점은'허위사실유포 목적 여부」, 아주경제, 2026년5월26일. 같은 시기 다른 취재에서도 방미심위는 폐쇄를 안전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서린, 「李 대통령'일베' 폐쇄 시사...현실 가능성은」, ZDNet Korea, 2026년5월28일.

만명 넘게 동의했지만 같은 법률적 한계에서 중단됐습니다⁶⁾.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접하는 경로가 일베보다 훨씬 넓다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조사에서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접하는 경로는 온라인이 83%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0년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이 혐오표현을 접한 1순위 매체는 유튜브로 38.8%였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 한 인스타그램 ‘자유대학’ 계정은 팔로워가 10만명, 특정 게시물 조회수가 200만회에 이릅니다⁷⁾.

혐오 코드가 만들어지는 곳이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그것이 도달하는 경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입니다. 폐쇄와 차단을 논의할 수 있는 곳은 도달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도달 범위가 압도적인 곳에는 게시물 심의라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2. 유럽은 규제의 단위를 바꾸었습니다

발제문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을 강화하고 작동 원리를 공개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발제문이 소개한 해외사례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2024년 5월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고, 네트워크집행법은 여기에 흡수됐습니다⁸⁾. 함께 소개된 프랑스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도 위헌 판결로 입법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법 모두 사업자에게 불법 게시물을 며칠 안에 지우라고 명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규제 방식은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자기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완화하며, 그 과정을 외부 감사와 규제기관에 검증받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플랫폼은 준법감시인을 두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콘텐츠 조정 보고서와 위험평가 보고서, 감사 보고서, 광고와 추천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추천에 사용되는 주요 매개변수를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규제기관과 심사를 거친 연구자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⁹⁾. 이 구조에서 국가는 게시물마다 혐오인지 아닌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디지털서비스법 제28조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이 조항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6) 홍신영, 앞의 보도.

7)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2019년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2020년; 「2026 10대 극우화 보고서: 소년 극우가 온다」, 뉴스타파, 2026년 3월 6일. 모두 발제문에서 재인용.

8) 방송통신위원회, 「독일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 동향 및 시사점 연구」(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4-22), 2024년. 독일은 2024년 5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e-Dienste-Gesetz, DDG)을 시행하면서 네트워크집행법을 대체하였다.

9)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제27조(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제34조-제35조(시스템 위험의 평가와 완화), 제37조(독립 감사), 제40조(규제기관 및 심사받은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

서, 이용자가 스스로 나이를 신고하는 방식은 정확성과 견고성이 부족해 조항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¹⁰⁾. 현재 엑스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상대로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2024년 5월부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역할을 맡아 이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2024년 활동보고서에서 관련 민원 824건을 접수하고 4건의 행정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¹¹⁾.

3. 접근을 막는 규제와 설계를 규율하는 규제

호주는 2025년 12월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온라인안전 규제기관 eSafety의 첫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시행 직전 85.9%에서 3개월 뒤 81.5%, 4.4%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¹²⁾. 같은 기간 메타는 호주에서 16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 75만6천개 이상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했습니다¹³⁾.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조치는 대부분 우회됐습니다. 반면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75만개가 넘는 계정 삭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논의는 아직 접근 제한 쪽에 쏠려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¹⁴⁾. 연령 확인 의무화와 무한 스크롤 제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¹⁵⁾.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SNS 관련 법안 8건 역시 가입 연령 통제와 부모 동의요건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¹⁶⁾.

2025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¹⁷⁾.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만들어진 추천과 자동재생 기능을 그대로 둔 채 가입 연령만 올리면, 호주에서 확인된 결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큼니다.

4.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미성년자가 다수 이용하는 서비스에 설계 책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추천을 기본값으로 꺼두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광고를 금지하며,

10)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minor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2025년7월14일 확정.

11) 심재민, 「온라인 혐오·불법 콘텐츠 규제의 출발점,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시선뉴스, 2026년6월10일.

12) eSafety Commissioner(호주), 소셜미디어 최소연령 규제1차 평가 보고서, 2026년. 「호주 '청소년SNS 금지법' 이후3개월...억제 효과는5%P뿐」, 경향신문, 2026년8월4일에서 인용.

13) 「호주 청소년SNS 금지 시행 앞두고...메타, 75만6천개 계정 삭제」, ESG비즈니스리뷰, 2026년8월. 로이터 보도 인용.

14) 「[사설] 청소년SNS 규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관건」, 경향신문, 2026년7월17일. 과의존 위험군 수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근거한다.

15) 유현민, 「청소년SNS 규제 어디까지...추천 알고리즘도 손본다」, 연합뉴스, 2026년7월25일.

16) 「부모 동의 없으면 추천 알고리즘 차단?...청소년SNS 규제 법안 살펴보니」, 2026년7월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17) 경향신문, 앞의 사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연속 재생처럼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만들어진 기능을 미성년자 계정에서 제한하는 것이 최소한입니다. 이 조치들은 어떤 게시물이 혐오표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혐오와 차별의 확산에 관한 연례 위험평가와 완화 조치 보고를 의무화하고 독립 감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와 감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고, 규제기관은 완화조치가 부실할 때 이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업자도 자기 서비스에서 혐오 콘텐츠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설명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셋째, 연구자와 시민사회에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조차 일베의 불법정보 비율을 산정하지 못합니다. 크롤링이 막혀 있어 실태조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¹⁸⁾. 발제문이 근거로 삼은 온라인 커뮤니티 텍스트 분석도 연구진이 직접 수집한 자료에 의존했고, 학교 현장 조사는 경기도의 중학교 한 곳에 그쳤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유통되는지 세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규제할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이것은 검열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온라인 규제를 말하면 곧바로 검열이라는 반론이 돌아옵니다. 앞의 세 가지 요구는 국가에 심의 권한을 더 주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가 게시물마다 위법 여부를 판정하는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가 자기 설계에 대해 지는 책임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위험평가와 독립 감사, 데이터 접근권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이용자의 발언 내용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설계 책무도 추천의 기본값과 광고 방식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도 함께 법제화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사업자는 분쟁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미리 지우는 쪽으로 움직이고, 플랫폼 책임론은 그 삭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가 심의를 늘리는 방식은 집행 부담을 키우면서 검열 논란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6. 덧붙이는 제안

첫째,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근거 규정은 생겼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조차 혐오와 차별 표현을 어디까지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합니

18) 아주경제, 앞의 보도

다¹⁹⁾.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다음 과제입니다.

둘째, 신고 경로에 학교를 포함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를 신뢰 기반 신고자로 지정해 그 신고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²⁰⁾. 교사와 학교,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를 이 지위에 두고 처리 결과를 회신받게 하면, 발제문이 지적인 교실의 무력함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무엇을 발견해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셋째, 규제 설계 단계에 청소년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올 때마다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가 반대해 왔습니다. 이 토론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자리인 만큼, 당사자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보호 조치가 왜 번번이 우회되는지도 함께 검토했으면 합니다.

19) 머니투데이, 앞의 보도. 한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물과 달리 혐오·차별 표현은 어디까지 불법정보로 간주해 제재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20)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제22조는 회원국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지정한 신뢰기반 신고자(trusted flagger)의 신고를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자녀와 치르는 혐오표현과의 전쟁

노주현

세 아이의 엄마로써 혐오표현과 싸워 온 세월은 큰 아이가 21살이 되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닐 때는 욕설을 사용하는 문제와 씨름을 했다. 오래도록 설득과 교육, 대화가 지난하게 이어졌다. 중학교에 가서는 온라인 상에서 생성되는 패드립(부모를 소재삼은 혐오표현 및 욕설)과 맞서야 했다. 이후 온라인 게임이 남자 아이들의 주류 놀이 문화가 되면서는 욕설, 패드립, 색드립, 외모평가 등 물밀 듯 밀려오는 다양한 혐오표현 속에서 두 아들도 고군분투했다. 중학교 3학년인 딸은 어떠한가? 친밀감의 표현인지 모를 욕설속에서 갈길을 잃은 적도 있었다. “엄마, 친구들사이에서 좀 췌보이려고 나 욕을 좀 하고 다녔어.” 라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가득했다. 부모에게는 착한 딸이 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착해보이면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갈등이 많았었던 것 같았다. 아이들과 부모들도 난무하는 혐오표현과 그에 따른 무수한 부수적인 효과들 속에서 밀고 당기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대략 학교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낸다. 학원을 다닌다면 그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령기의 아이들은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래집단 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또래집단의 문화적 파급력은 대단하다. 이것은 인스타그램의 단디엠이나 릴스, 아이들이 올리는 게시물, 좋아요를 누가 얼마나 눌렀는지에 따라 생성되고 재생성되면서 퍼져나간다. 나는 딸의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몇 개월 전에 딸이 인스타 단디엠을 통해 친구들에게 따돌림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소년의 시간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물을 보게 되었는데, 소년이 또래 소녀를 살해했다는 내용보다 SNS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세계를 기성세대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수사과정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딸에게 SNS를 통한 일이 벌어졌고, 딸과 오래도록 단디엠과 친구들의 계정등을 살펴보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다행히 이를 통해 아이들 사이에 오해가 풀어져 해결이 잘 되었다. 딸아이를 통해 SNS사용은 매우 주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엄마와 인스타그램계정의 대화내용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육아기에 부모들은 정말 시간이 없다.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고 이것을 충당하려면 더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수년 동안 능력주의 사회가 준 사회적 압박은 더 많은 사람들을 경쟁체제에 늘어뜨려 놓았고, 소외 올려치기(자기보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위치짓는 방식)가 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향한 욕망은 일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어버렸다. 부모들에게는 가정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압박이 완화되어야 한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반전되어야 모두가 이에 따른 과실을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 사이에 퍼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오랜 과실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녀의 SNS사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기통제를 가르치는 것이다. 핸드폰 사용시간과 SNS사용시간 및 기록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SNS사용시간 통제는 자녀가 혐오표현에 노출되는 물리적 시간을 줄여준다. 그리고 또래집단에서 떨어져 진짜 사회의 다른 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부모와의 대화, 영화보기, 학습, 가족간의 사소하거나 작은 일상은 미디어중독에서 자녀를 빠져나오게 하는 요소들이 된다. 내가 만나는 부모들에게 SNS사용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호주처럼 어서 금지법안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러한 말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자녀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는 바람이 아닐까 한다.

내란 정국을 지나며 나는 교사의 정치참여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선정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의 교권확립을 위해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정치문제는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정치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가 정치중립적인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지난 권력자들의 잘못이다. 학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을 배우는 장소여야 한다. 이 공존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정치수업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사의 정치참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교실에서 혐오표현을 제지하려고 해도 법적권한이 없다면 교사들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일에 개입하려고 할까? 의문이다. 혐오표현을 제지하려고 해도 망설임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정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청소년 혐오표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진보당 기획 토론회 』

김연웅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문강사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운영위원
해병대 양성평등 자문위원

토론문을 시작하며 여러 이력을 명시했다. 이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토론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자 다짐이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운영과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교실이라는 현장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을 통해 청년 남성과 대학을, 해병대 자문 및 교육을 통해 군인과 군대라는 현장을 매일 만나며 답을 찾기 위해 수없이 물어보고 들었다. 청소년과 청년을 &이대남의 극우화&나 &차별주의자 남성 청소년& 정도로 납작하게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이미 놀이이자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제대로 볼 수도, 이들과 손잡고 걸을 진보정치의 미래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토론문은 「청소년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학술적 논평이 아니라, ① 연구가 진단한 부끄러움의 소멸이라는 현상에 대한 현장의 재확인, ② 남성 청소년 성교육 현장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구조적 곤경, ③ &기소하지 말고 초대하라&로 요약되는 성교육 현장의 실천 모델, 그리고 ④ 진보정치에 드리는 네 가지 정책 제언의 순서로 구성된다.

1. 연구 자료에 대한 총평과 세 가지 보완

본 연구는 청소년 혐오문화가 이미 주변부의 일탈이 아니라 또래 다수의 공기가 되었다는 점, 과거 은어 문화와 현재 영 일베 문화 사이에 다섯 가지의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교실이 무력한 이유를 ‘시간’, ‘권위’, ‘콘텐츠 매력’, ‘제도적 차원’의 네 가지 비대칭으로 설명한 점에서 매우 정교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끄러움이라는 사회적 면역의 소멸’이라는 진단은 활동가가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교실의 온도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한 핵심적인 통찰로 보인다. 이에 현장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다섯 갈래 혐오는 분리되어 소비되지 않는다

연구는 청소년 혐오표현을 정치/여성/지역·역사/인종·국적/소수자 다섯 갈래로 분류하였으나,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다섯 갈래는 별개의 대상이 아닌 ‘재미’라는 하나의 코드로 통합되어 소비된다. ‘운지’라는 표현에 웃는 청소년은 ‘김치녀’에도 ‘짹개’에도 ‘게이 XX’에도 같이 웃는다. 특정 혐오표현만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미’라는 기준과 ‘타인을 웃음(조롱)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감각’이라는 상위 층위로 통합적으로 접근해 ‘정말 재미있는 게 맞는지’, ‘모두가 재밌어 하고 있는지’, ‘지속가능한 재미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매개자가 던지고 청소년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평등 교육과 혐오대항 교육 그리고 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친화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능력주의 좌절과 결합된 관계 자원의 결핍

연구가 능력주의 좌절을 혐오의 뿌리로 지목한 진단에 동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남성 청소년의 상당수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공 경험과 감정 언어 자원의 부재가 이어져 온 상태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좌절·불안·수치를 표현할 언어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그 감정을 ‘내 잘못이 아니라 OO 때문’이라는 외부화된 서사로 자동 변환하여 24시간 배달한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의 성역할 고정관념 지표가 2020년 대비 2023년에 도리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남성이 해야 한다’ 22.4% → 33.6%, ‘가사는 여성이 해야 한다’ 12.7% → 26.4%, ‘가족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 12.3% → 21.5% 통계는 이 회로가 실증적으로 진행 중임을 방증한다.

이에 본 토론자는 앞선 여러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성교육의 중심축을 ‘범죄 예방’에서 ‘관계 역량’으로 이동시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 제기해 왔다(한겨레·여성신문·한국NGO신문, 2026).

3) 남성 청소년은 동일체가 아니다

추지현(2021) 연구는 청년 남성의 젠더 인식을 ‘보수·변혁’, ‘지향·같음’, ‘지향·평등’, ‘당위 수용’의 4가지 집단으로 분석하였는데, 네 집단 모두 여성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보수 집단을 제외한 세 유형은 오히려 차별 시정과 전통적 남성성 변화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남성 청년(청소년)을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 단일화하는 서사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정책 대응은 ‘남성 청소년 전체’가 아닌

혐오 담론의 ‘생산자·확산자·소비자·이탈자’로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소비자’와 ‘이탈자’ 층에 대한 교육적 개입 여지가 정책의 실질적 지렛대라 할 수 있다.

2. 남성 청소년 성교육 현장의 세 가지 구조적 곤경

■ 곤경 1 : ‘재미’와 ‘남성성’의 파놉티콘(Panopticon)

남다른성교육연구소가 발간하는 성교육 전문지 「남다른 바람」 16호에는 청소년 디지털 문화 속 차별과 혐오 및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청소년 인터뷰가 실려있다. 해당 인터뷰 내용과 현장에서 청취된 에피소드들을 기반으로 본 토론자는 남성 청소년이 속해있는 현장을 ‘재미’와 ‘남성성’의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 ‘재미’와 ‘남성성’이라는 간수로부터 감시당하는 구조의 교실 속에서, 강한 위계가 형성되고, 생존하기 위해 재미와 남성성에게 혐오표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종사하거나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를 내재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성적 대상화와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 저하로 이어지는데, Cikara·Eberhardt·Fiske(2011)의 fMRI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남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 이미지를 볼 때 타자의 마음을 추론하는 신경망(내측 전전두피질·후측 대상피질·측두극) 활성이 감소하고 물체 인식 영역이 활성화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팽배할수록 인지 회로 수준에서 사람을 사물로 처리하는 방향의 사고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곧 성적대상화와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듯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7개 법률이 개정되고 양형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인당 삭제 지원 건수가 약 30건에 달하는 ‘재유포의 구조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처벌 및 규제 강화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역사가 ‘파놉티콘’을 ‘시놉티콘(Synopticon)’으로 해체했듯, 본 토론자 역시 교실에서도 권력을 해체하는 질문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미’와 ‘남성성’으로부터 감시받던 다수가, 함께 ‘재미’와 ‘남성성’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교실 안에서 구축해 나가는 일, 이것이 처벌 이후에 남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 곤경 2 : 가해자 프레임의 소진 - 대안적 남성성의 부재

성폭력·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받은 남성 청소년들의 가장 빈번한 반응은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느냐’는 되물음이다. 대부분의 교육이 ‘하지 말라’로 종결되기에, 남성 청소년

은 스스로를 잠재적 가해자로 오해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발이나 반동과 연결되어 향하는 곳이 바로 인셀 담론과 안티-페미니즘 서사다.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남성 청소년과 스스로가 가해자인지 모르는 남성 청소년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남성 청소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대안적 남성성과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인셀 담론과 안티-페미니즘 서사가 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 미국의 여성주의 저널리스트인 글로리아 스타이넴은 말했다. ‘우리 사회는 여자 어린이를 남자 어린이와 같은 방식으로 키우려고는 하지만, 남자 어린이를 여자 어린이처럼 키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 **공경 3 : 악성 민원 대응 및 매개자·양육자 대상 교육의 중요성**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을 시도하는 강사는 학교로부터 ‘학부모 민원 때문에 처벌·법·규제 중심으로만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강사 개인의 이름과 SNS가 극우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며, 교사가 ‘정치 무균실’에 갇혀 있는 만큼 외부 강사 역시 더욱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학교가 혐오에 맞설 최소한의 공간이 되기는 어렵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교사 등 매개자와 양육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고 실질화 되어야 한다. 청소년 교육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매개자와 양육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모양이 될 따름이다.

3. 현장의 실천 모델 ‘Invite, Not Indict’

MVP Strategies의 방관자 접근법(The Bystander Approach)은 성폭력·혐오 대응 교육의 원칙으로 ‘Invite, Not Indict(기소하지 말고 초대하라)’를 제시한다. 남성 청소년을 예방과 처벌의 대상이 아닌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주변인(Empowered Bystander)으로 초대하는 관점의 전환이다. WHO와 Promundo의 성평등 프로그램 분류에서 젠더-변혁적(gender-transformative) 접근에 해당되며, 남다른성교육연구소가 그간 개발·운영해 온 남성 청소년 특화 성교육의 이론적 좌표이기도 하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소년과 남성을 주체로 초대하는 성교육 함께 만들기’ 교육안



2026. 8. 19. (수) | 부산·경남·제주 권역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소년과 남성을 주체로 초대하는 성교육 함께 만들기

김연웅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 성복, 드림) 성교육 전문강사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양성평등센터 성교육 전문강사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운영위원(전 공동대표)
해병대 양성평등 자문위원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남성 청소년 성교육 운영 원리



남성 청소년 인터뷰 자료

참가자 A: 그런데 사실 남자들이 여성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는
단 말이에요. 섬세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런 면모를 되게 좋아
해요. 그래서 애들도 몸 자랑하면서 스킨십도 하고, 사랑한다
막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여성스러운 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 잘 헤아려주는 거 좋아하고, 자기 생각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예쁘게 말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사회적으
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내적으로는 여성에 관해서 긍정적
인 것들이 많고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남성성이 더 중요하고,
여성혐오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혐오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처: 남다른 바람 16호

남다른 바람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앰네스티×남함페 「혐오대항 교육」의 대항표현 프레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와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이 2021년 공동 제작한 혐오대항교육 및 매뉴얼은 대항표현(counter-speech)이 시민의 언어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적용에서 확인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특권과 차별 그리고 구조에 대해 이해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2) 낮은 어른의 규정이 아닌 또래 문화와 또래 사이의 언어로 전달될 때 스며든다는 것, 3) ‘가해자를 굴복시키는 언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주변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



4. 진보정치에 드리는 네 가지 정책 제언

■ 제언 1 : ‘차별·규제’ 중심의 성교육에서 ‘관계 역량’ 중심의 성교육으로의 전환

- 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 추진을 통한, ‘관계 역량’ 중심 성교육의 범교과 영역 지위 확보 및 성교육의 독립적인 교육 시간 제도화
- 2024년 이후 축소된 학교 성교육 예산의 복원 및 포괄적 성교육 국가 표준 커리큘럼 개발

■ 제언 2 : 매개자(교사·강사)의 정치기본권과 안전 보장

- 국가공무원법·정당법·교원노조법 개정 추진을 통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입법
- 학교 외부 위축 성교육 활동가의 안전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신상 노출·좌표찍기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구축

■ 제언 3 : 남성 청소년 특화 성평등 교육 및 혐오대항교육의 국가 인프라화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K-MEN(한국 맨엔게이지 네트워크),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등이 이미 축적한 남성 청(소)년 특화 교육 자원을 전국 광역 단위로 공적 확장
- 한국판 ‘에퀴문도’ 조사 실시 : 소년과 남성의 남성성 인식, 관계 역량, 성평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기초 연구의 부재. ‘에퀴문도’ 영국 조사를 모델로, 한국형

기초 연구를 성평등가족부 및 여성정책연구원 등이 협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제언 4 :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정치인·공직자 혐오발언 규율 강화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의 사회적 마지노선 확정
- 정당 현수막 혐오표현 규제 법안(손슬 의원 발의)의 확장을 통한 정치인·공직자 혐오표현 규제 강화

5. 결론 : ‘질문의 공간’ 을 만드는 일

우리가 던질 질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남성 청소년 안 바뀔다고요? 제대로 교육한 적은 있나요?’

‘청소년이 혐오를 놀이로 소비한다고 말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혐오 아닌 다른 놀이를 제대로 줘준 적은 있나요?’

부끄러움의 소멸은 청소년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혐오와 차별이 아닌 언어를 제공하지 못한 우리의 사회구조적 결함이 아닐까. 진보정치의 과제는 웃음의 옆 자리에 혐오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함께 놓아 주는 일이며, 이는 처벌과 규제 강화만으로는, 소수 활동가의 헌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학교와 활동가, 국가와 시민사회와 함께 구축하는 ‘질문의 공간’ 이 절실히 필요하다.